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중등직업교육 지원방안 연구

김진모* · 이명훈** · 김기용*** · 조영아**** · 오진주 · 류지은 ·
김선근*****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 · **충남대학교 · ***케이엠플러스컨설팅 ·
****순천향대학교 · *****서울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 방향에 따라 중등직업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우선적인 지원방안들을 확인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14편의 선행연구를 통해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중등직업교육 지원방안(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 도출 결과 9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둘째, 지원방안 영역별 세부 지원방안 도출 결과 총 35개의 세부 지원방안이 도출되었다. 셋째,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법령 개정, 사회적 인식 개선, 재정 확보 관련 방안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세부지원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노동시장 개선, 현장실습생 근로보호 강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세부 지원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영역 선정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지원방안에는 주로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과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중등직업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중등직업교육 비중의 현행수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체제 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과, 실제 중등직업교육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주제어 : 중등직업교육, 중등직업교육 비중, 중등직업교육 지원방안

■ 이 논문은 2013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3S1A5B8A02057041).

■ 교신저자: 조영아(yacho@sch.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중등직업교육은 국가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본래 목적에 따라 그동안 국가경제와 맞물려 산업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이주호, 홍성창, 2014).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중등직업교육의 방향이 완성형 교육이 아닌 계속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9년도에는 전문계고의 진학률이 70%가 넘는 등 중등직업교육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청년 실업문제와 맞물려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 노동시장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가 산업인력양성이라는 중등 직업교육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실제 청년실업 및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고용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현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중등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고졸취업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허영준 외, 2014).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고졸취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정책의 적절성 및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장명희 외, 2012), 중등직업교육의 산업인력양성 기능 강화는 직업교육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인력 미스매치 및 청년실업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김진모, 2015).

이와 같은 변화를 더 촉진하고자 최근 정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의 3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2016).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에서 직업계고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대 최대 51%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1998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수 비율은 전체 고등학교 학생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교육부, 2015). 정부의 이러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수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 2022년 중등직업교육 학생 비중을 3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고졸취업을 활성화하여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및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중등직업교육 비중 혹은 규모 조정과 관련하여 학령인구 감소 및 중등직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그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박도순 외, 2004; 이공래 외, 1999; 이해영 외, 2011)들도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고졸인력에 대한 산업수요 증가(나승일 외, 2009; 박동열 외, 2010a) 및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김진모, 2015)로 중등직

업교육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보다 비중을 둔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등직업교육 비중 조정에 대한 방향이 새롭게 설정됨에 따라 중등직업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업무계획 안에는 중등직업교육 비중 조정과 관련하여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 정도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학령인구에 대비하여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등직업교육 체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 수는 교원수급 및 교육시설 재배치, 교육재정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며(민부자, 홍후조, 2011; 백일우, 권재현, 2006), 더욱이 중등직업교육의 경우 학생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및 질 관리,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역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학생 수 비중 조정을 위해서는 중등직업교육의 전반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 비중 확대라는 조정 방향에 따라 중등직업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방안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 비중 확대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중등직업교육이 향후 나아가 할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중등직업교육의 양적 및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라 중등직업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 및 세부 지원방안을 도출한다.

둘째,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 및 세부 지원방안별 우선순위를 확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 비중 확대 계획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비중과 관련된 논의들은 축소와 확대의 두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축소와 관련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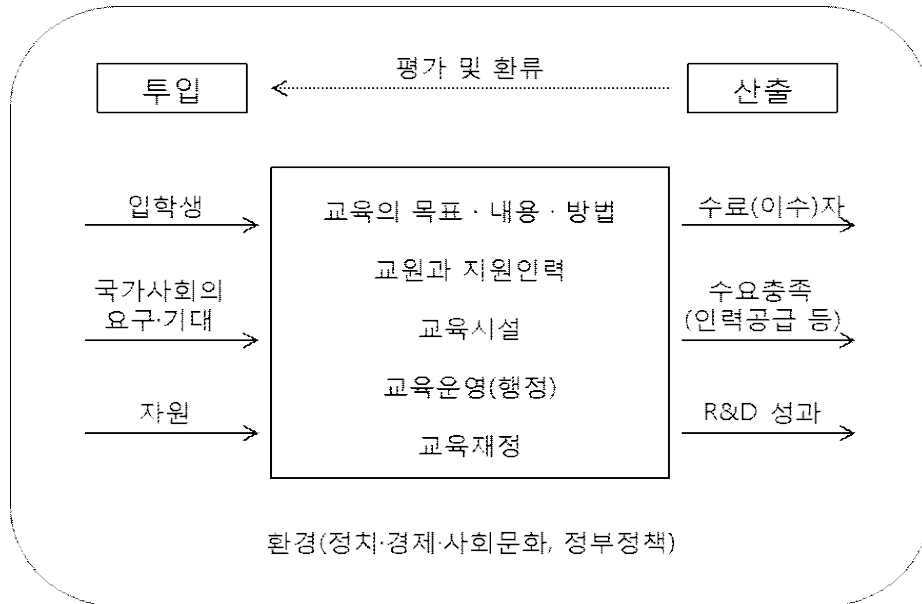
견(교육부, 2015; 이해영 외, 2011; 정진철 외, 2010; Trautvetter, 2009)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확대와 관련해서는 산업계 수요 및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김진모, 2015; 박동열 외, 2010a)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중등직업교육 비중과 관련해서는 어떤 요인들을 주요하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논의 속에 최근 정부는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요인 외에도 산업계 수요 등을 주요하게 고려한 계획으로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 의견에 보다 비중을 둔 결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 계획은 구체적으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입학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여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 비중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교육부, 2016). 이 계획은 시도 및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비중이 적용될 것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일반고의 직업계고로의 전환, 절대 부족 분야에 대한 학급 증설, 거점 특성화고 육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직업계고 설립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6). 즉, 향후 정부는 직업계고 학생 수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 비중 확대를 위한 고려 요인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고등학생 수에서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등직업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중등직업교육 체제의 구성요인들을 고려하여 각각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중등직업교육 체제의 개념과 범위를 확인하고 중등직업교육 체제의 구성요인들을 확인하여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체제는 학자나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구성요소나 부분이 전체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조화롭게 기능함으로써 어떤 정해진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려는 집합 또는 단위로 정의될 수 있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체제는 기본적으로 ‘투입-과정-산출’의 형태로 구성(정철영, 박행모, 강대구, 나승일, 김진모, 2013)되며 교육체제 역시 크게 ‘투입-과정-산출’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신복(2011)의 교육체제의 구성요소 모형을 활용하여 중등직업교육의 체제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에 기반하여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을 도출하였다.



[그림 1] 교육체제의 구성요소

출처: 김신복(2011). 교육발전: 정부역할과 정책수단. 한국행정학회 정기학술대회(2011년 하계학술대회)

김신복(2011)의 교육체제 구성요소 모형에서는 투입요소에는 입학생, 국가사회의 요구 및 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입하는 자원, 과정요소에는 교육의 목표·내용·방법, 교원과 지원인력, 교육시설, 교육운영(행정), 학교단위의 교육재정이 포함되며, 산출에는 중등직업교육을 이수한 졸업생, 노동시장으로의 인력공급, 연구개발 성과가 포함된다. 이 외에 정부의 정책 등을 환경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역시 크게 투입, 과정, 산출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투입요소에는 학생선발, 사회적 인식 관련 영역, 과정요소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교원 및 지원인력, 시설 및 기자재, 교육재정 영역, 산출요소에는 질 관리 영역, 환경요소에는 직업교육 정책 및 관련 법령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3. 관련 선행연구 분석

선행연구의 분석은 교육체제 구성요소 모형(김신복, 2011)을 기반으로 설정한 지원방안 영역에 따라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경우 학생 수와 같이 비중 조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원방안을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아 보다 포괄적으로 중등직업교육 체제개편과 관련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제 중등직업교육의 비중 확대는 결국 현행 체제의 개편

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김진모 외, 2015), 이 연구에서는 중등직업교육 비중과 함께 중등직업교육 체제개편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중등직업교육 체제개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체제의 기본 구성요소인 투입, 과정, 산출, 환경의 각 영역을 포괄하는 지원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구가 단일 영역에 대한 지원방안만을 제시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영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이 특정 영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체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중등직업교육 체제개편과 관련한 지원방안들은 <표 1>과 같다.

<표 1> 중등직업교육 적정비중 및 체제개편 선행연구 분석 결과

구분	지원영역	세부지원방안	관련연구
투입 요소	직업교육 학생유치 방안	직업교육 전형의 다양화	나승일 외(2010), 이종성 외(1997)
		학생 선발, 취업, 진학상담의 전문성 강화	김선태, 박윤희(2002), 박동열 외(2010a), 이용환 외(2008)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초·중학교 학생 대상 직업 및 진로교육 강화	박도순 외(2004), 이종성 외(1997)
		지역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의 기능 확대 고졸 취업자에 대한 임금 격차 해소 방안 계열 구조 개편을 통해 고등학교 단계의 기초 직업교육 기관으로 위상 재정립	김선태, 박윤희(2002) 김향아(2013)
과정 요소	직업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	NCS 기반의 학과 및 교과군 재구조화	박동열 외(2010b)
		현장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과 연계된 교육내용 선정	김선태, 박윤희(2002)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직업교육 과정 운영	이종성 외(1997)
		NCS 기반 교육과정 이수자 인증제 운영	박동열 외(2010b)
		동일계열 진학자를 위한 대학교육과정 운영	박도순 외(2004)
		직업계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박동열 외(2010b)
	직업교육 교원 수급 및 양성 방안	실습 및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김기홍 외(2010), 나승일 외(2010), 박도순 외(2004), 박동열 외(2010b), 이용환(2008), 박도순 외(2004), 박동열 외(2010a), 박동열 외(2010b), 이용환 외(2008), 이종성 외(1997)
		직업교육 외 진로지도 강화	
		신설 계열 및 학과의 직업교육 교원 확보	김선태, 박윤희(2002),
		직업교육 교원 배치 기준 재검토	김선태, 박윤희(2002),
		직업교육 교원 정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강호감 외(2002), 나승일 외(2010), 이해영 외(2011)
		전문교과 교원의 현장실무 및 전문성 강화	김기홍 외(2010), 김선태, 박윤희(2002)
		보통교과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박동열 외(2010b), 이용환 외(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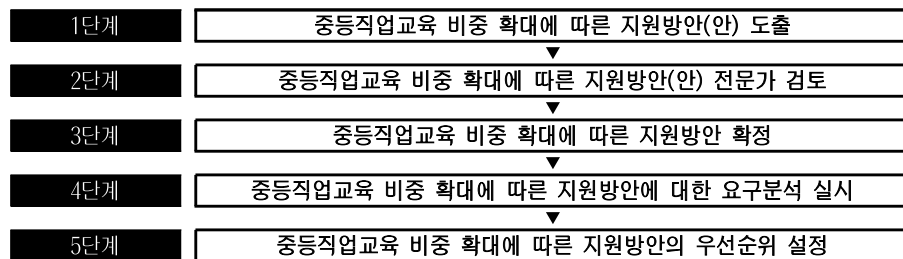
(표 계속)

구분	지원영역	세부지원방안	관련연구
과정 요소	직업교육 교원 수급 및 양성 방안	지원인력 확보 및 지원인력의 교육역량 강화	나승일 외(2010), 유명익, 서리나(2002)
	교육 시설 및 기자재 개선 방안	노후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 및 활용 방안	강호감 외(2002), 이종성 외(1997)
		공동실습소 및 순환실습지원반 확충 및 활용 방안	나승일 외(2010), 이종성 외(1997)
	직업교육 운영 및 체제 개선 방안	고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	박도순 외(2004), 백성준, 황인성(1997), 허숙, 강호감(2003)
		학점은행제의 확대 적용(고교단계)	이종성 외(1997)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 간에 교육과정 연계 운영체제 구축	김선태, 박윤희(2002), 이종성 외(1997)
		계열 명칭 관련 정부부처의 협력 및 지원 유도 강화	김선태, 박윤희(2002)
산출 요소	교육 재정 지원 방안	지방자치단체 부담 전입금 증액(7% 이상)	강호감 외(2002)
		표준 교육비 산출 기준 개편	김선태, 박윤희(2002)
	직업교육의 질 유지 및 관리 방안	직업교육 평가 체제 개선	박도순 외(2004), 이해영 외(2011)
		종합적인 직업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종성 외(1997)
환경 요소	직업교육 정책 강화 및 확대 방안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활성화	이종성 외(1997)
		선취업 후진학 체계 강화	박동열 외(2010a)
		국가역량체계 구축 가속화	이종성 외(1997)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 및 산학협동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	김선태, 박윤희(2002), 이종성 외(1997)
	관련 법령 개정 방안	고졸 남학생의 군 입대 문제 개선	김향아(2013), 나승일 외(2010)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	강호감 외(2002)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	강호감 외(2002)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중등직업교육 지원방안(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출된 지원방안의 현장 적용을 높이기 위해 중등직업교육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중등직업교육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2] 연구절차

2. 자료수집 및 분석

가. 문헌분석 및 전문가 검토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 도출을 위해 김신복(2011)의 국가 교육체제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등직업교육 비중 혹은 규모 및 체제 관련 선행연구 33편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14편의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10개 지원방안 영역과 37개 세부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지원방안의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 총 9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중등직업교육 관련 전문가는 중등직업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산업체, 학계, 관련 정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검토 내용은 지원방안 영역 구성 및 지원방안 영역별 세부지원방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었으며 전문가 검토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전문가 검토에 사용된 설문에는 분석 요소별 지원방안 영역의 적절성과 지원방안 영역별 세부 지원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고 각각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이후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9개 지원방안 영역과 35개 세부 지원방안으로 구성된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중등직업교육 지원방안을 확정하였다.

나. 조사도구

지원방안 영역 및 세부 지원방안별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①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별 중요성 및 시급성, ②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에 대한 기타 요구사항 및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중등단계 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은 세부 지원방안별로 중요성과 시급성을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그림 3] 참조). 이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조사 도구의 타당도는 지원방안 확정 과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		중요성					시급성				
① 국가산업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입학정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입학정원 확대 - 지역별 입학정원의 탄력적 배치 (지역별 조정 가능한 기준 제시)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보통		매우 중요 함		전혀 시급 하지 않음		보통		매우 시급 함
	1	2	3	4	5		1	2	3	4	5
	←————→					←————→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방안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가요?

[그림 3] 조사도구 예시

다.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우선순위 도출

전문가 검토 후 지원방안의 현장 적용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분석을 실시하여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요구분석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설문대상은 중등직업교육 관련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각 집단은 학교집단, 정책집단, 전문가집단이 포함되었다.

학교집단의 경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장, 교감, 직업교육 관련 부장급 교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특성화고 교장 474명, 교감 500명, 마이스터고 교장 36명, 교감 36명 전수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성화고 직업교육 관련 부장급 교사는 각급 학교의 관련 부서가 3-5개임을 고려하여 학교당 5명으로 표집 산출하여 475개교의 2,37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마이스터고 부장급 교사는 마찬가지로 36개교 18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학교집단은 총 3,6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책집단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시도교육청별로 3명씩 표집산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직업교육과 과장 1명, 장학관/교육연구관 1명, 장학사/교육연구사 1명 등 17개 시도교육청의 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집단의 경우 진로직업교육 관련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관련 부서 연구원 전수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개 부서 134명, 한국교육개발원 6개 부서 161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개 부서 35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3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9월 1일에서 25일까지 총 3,9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 학교집단 978명, 정책집단 19명, 전문가집단 67명 등 총 1,064명이 응답하였다. 학교집단, 정책집단, 전문가집단의 응답률은 각각 27.2%(3,601명 중 978명 응답), 37.3%(51명 중 19명 응답), 20.3%(330명 중 67명 응답)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요구분석에 기반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때 요구는 바람직한 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길대환, 김진모, 2009;

박소연, 2009).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현재 수행되고 있는 방안 보다는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방안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 연구에서 요구는 각 방안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할 방안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적 분야별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요성과 시급성을 확인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표 2> 설문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824	77.4	근무 지역	서울		202	19.0
	여자		240	22.6		경기		1	0.1
	무응답		0	0.0		인천		16	1.5
	소계		1,064	100.0		강원		58	5.5
연령	20~29세		15	1.4		충북		55	5.2
	30~39세		67	6.3		충남		86	8.1
	40~49세		117	11.0		세종		35	3.3
	50~59세		250	23.5		전북		40	3.8
	60세 이상		19	1.8		전남		0	0.0
	무응답		596	56.0		대전		2	0.2
	소계		1,064	100.0		광주		31	2.9
직급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장	105	10.7		경북		121	11.4
		교감	165	16.9		경남		150	14.1
		부장급교사	698	71.4		부산		93	8.7
		무응답	10	1.0		대구		113	9.4
		소계	978	100.0		울산		35	3.3
	시·도 교육청	장학관/ 교육연구관	8	42.1		제주		26	2.4
		장학사/ 교육연구사	9	47.4		무응답		0	0.0
		무응답	2	10.5		소계		1,064	100.0
		소계	19	100.0	소속 기관	특성화고		892	83.8
						마이스터고		86	8.1
현재 업무 에서의 경력	5년 미만		776	72.9		시·도교육청		19	1.8
	5~10년 미만		64	6.0		연구기관		67	6.3
	10~15년 미만		48	4.5		무응답		0	0.0
	15~20년 미만		37	3.5		소계		61	100.0
	20년 이상		39	3.7	소속 기관	특성화고		892	83.8
	무응답		100	9.4		마이스터고		86	8.1
	소계		1,064	100.0		시·도교육청		19	1.8

성별은 남자(77.4%)가 여자(22.6%)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50~59세(23.5%)가 가장 많았고, 직급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는 부장교사(71.4%)가, 시·도교육청에서는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47.4%)가 가장 많았다. 현재 업무에서의 경력은 5년 미만(72.9%)이 가장 많았으며, 근무지역은 서울(19.0%)이, 소속기관은 특성화고(83.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Microsoft Excel 2013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평균,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가.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 및 세부 지원방안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초안의 지원방안 영역 및 세부 지원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전반적인 영역의 구성 및 내용, 세부 지원방안의 구성 및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역 구성은 전반적으로 타당하지만 일부 지원방안 영역 별 용어 및 표현에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세부 지원방안의 경우 삭제, 방안의 현실성과 내용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원방안 영역 별 용어 및 표현 수정, 일부 세부 지원방안 삭제, 세부 지원방안 별 용어 및 표현 수정이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 9개 영역, 35개의 지원방안이 도출되었다(<표 3> 참조).

<표 3>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 및 세부 지원방안 최종안

구분	영역	세부 지원방안
투입 요소	1.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	1-1. 국가산업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입학정원 조정
		1-2. 입학 전형 다양화와 선발 기준 개선
		1-3. 학생선발 및 입학상담의 전문성 강화
		1-4.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의 희망자 수용 확대 및 운영 개선
		1-5. 직업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확보
	2.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2-1. 초·중학교 학생 대상 직업 및 진로교육 강화
		2-2.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및 위상 재정립
		2-3. 지역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의 기능 확대
		2-4. 고졸 인력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
과정 요소	3. 직업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	3-1. NCS 기반 교육과정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3-2. 직업계열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3-3.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과정 운영
		3-4.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3-5. 수업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결과 공유
	4. 직업교육 교원 수급 및 양성 방안	4-1. 신설 계열 및 학과의 직업교육 교원 확보
		4-2. 직업교육 교원 정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4-3. 전문교과 교원의 표준역량모델을 통한 전문성 강화
		4-4. 보통교과 교원의 직업교육 분야 전문성 강화
		4-5. 지원인력 확보 및 지원인력의 교육역량 강화

(표 계속)

구분	영역	세부 지원방안
과정 요소	5. 직업교육 시설 및 기자재 개선 방안	5-1. 노후화된 보유시설에 대한 개선 및 활용 방안
		5-2. 공동실습소 및 공동훈련센터 확충 및 활용
		5-3. 지역내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설 및 기자재 활용
	6.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	6-1. 직업교육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전입금 증액
		6-2. 직업교육 표준교육비 산출 기준 개편
		6-3.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직업교육재정 확보
산출 요소	7. 직업교육의 질 관리 방안	7-1. 종합적인 직업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7-2. 지역별 직업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7-3.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
		7-4. 일반계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안적 직업교육 과정 관리 체제 구축
환경 요소	8. 직업교육 정책 확대 및 강화 방안	8-1. 선취업 후진학 체계 강화
		8-2. 교육·훈련·지격을 연계한 국가역량체계(NCF) 구축 가속화
		8-3. 관련 부처 정책과의 연계 강화
	9.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9-1. 고졸 남학생의 병역 관련 제도 개선
		9-2. 고교 현장실습생 근로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9-3. 재학생 일학습병행제도 도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

나.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별 세부 지원방안의 상세 내용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별 세부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 <표 5>, <표 6>과 같다.

<표 4> 투입요인 관련 지원방안 영역 및 세부 지원방안 내용

영역	세부 지원방안	상세 내용
1.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	1-1. 국가산업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입학정원 조정	• 국가기간산업 분야의 입학정원 확대 • 지역별 입학정원의 탄력적 배치(지역별 조정 가능한 기준 제시)
	1-2. 입학 전형 다양화와 선발 기준 개선	• 특별전형 비율 확대 및 자격요건 다양화 • 다문화 가정, 보훈 가정 등을 위한 특별전형 마련 • 특성화고 신입생의 성적 중심 선발 기준 개선
	1-3. 학생선발 및 입학상담의 전문성 강화	• 산업구조에 따른 입학, 취업, 진학/후진학 상담자료 개발 • 학과별 인력양성 목표 명확화 및 유형별 성장경로 정보 제공 •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한 입학 및 진로정보 제공
	1-4.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의 희망자 수용 확대 및 운영 개선	• 일반고 진학 후 직업교육 희망자 및 전학자 수요 충족을 위 한 특성화고 거점학교 운영 지원 •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희망자를 위한 차별화된 직업교육 과정 및 단기 NCS 자격과정 개설 및 운영
	1-5. 직업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확보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NCS 자격과정 개설 및 운영 • 직업교육과정 이수율 통한 학력인정 방안 마련
2.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2-1. 초·중학교 학생 대상 직업 및 진로교육 강화	• 다양한 진로 경로에 대한 홍보 강화 •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 중학생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직 업교육 제공

(표 계속)

영역	세부 지원방안	상세 내용
2.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2-2.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및 위상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 특화된 직업교육 제공을 통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위상 재정립 • 선취업후진학 선도기관으로서 위상 재정립 • 중숙련 이상 예비 명장 양성 기관으로서 위상 재정립
	2-3. 지역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의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기초직업능력 배양 및 전문직업능력 향상 기능 확대 • 지역의 산업 및 직업구조 반영을 통한 지역 필요인력 양성 기능 확대 • 중학생 및 지역주민 대상 단기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4. 고졸 인력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취업자에 대한 임금 격차 해소 방안 마련 • 관련 정부기관(고용노동부, 산업자원통사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직무 및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 장려 및 지원 • 정부 및 교육부 차원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한 채용 기회 확대

<표 5> 과정요인 관련 지원방안 영역 및 세부 지원방안 내용

영역	세부 지원방안	상세 내용
3. 직업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 방안	3-1. NCS 기반 교육과정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교사의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전문성 강화 • NCS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산업기사 수준의 NCS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취득 가능 경로 도입
	3-2. 직업계열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의 보통교과 최저이수기준인 66단위 규제 완화를 통해 학교 역량에 따라 전문교과의 단위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개선 •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위한 보통교과 목표 및 교육과정 개편 • NCS 기반 공통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직업기초능력 과목 편성 확대
	3-3. 직업교육기관 간 연계 강화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방송통신고-특성화고 수업 연계의 대안적 직업교육 과정 운영
	3-4.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확대 • 프로젝트 학습 등 직업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적용 사례 발굴/확산
	3-5. 수업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결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연구회를 통한 NCS 활용 보충 및 심화교재의 단계별 개발 및 교과서와 교수-학습에 필요한 패키지 자료 개발 • 교과별 수업연구회의 결과 확산을 위한 한국학술정보진흥원 등과의 연계 구축
4. 직업교육 교원 수급 및 양성 방안	4-1. 신설 계열 및 학과의 직업교육 교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양성 대학의 학과 신설 및 교육과정 개정 • NCS 교과군 구분에 따른 새로운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신설 및 기준 마련 • 신규 전공 발생시 교원 수급을 위한 유연한 표시과목 신설 체제 마련 • 신설계열에 대한 실기교사 자격 활용 방안 마련

(표 계속)

영역	세부 지원방안	상세 내용
4. 직업교육 교원 수급 및 양성 방안	4-2. 직업교육 교원 정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에 교과(군)별 채용 규모 및 수요에 대한 체계적 자료 제공 • 시도교육청별 교원 운영의 질 관리에 대한 책무성 강화 • 시도교육청별 전문교과 교원 배치에 대한 기준 마련
	4-3. 전문교과 교원의 표준역량모델을 통한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교과 교원의 표준역량모델 개발 • 교원의 연수학점제 확대 및 장학 활동 지원을 통한 교원역량 개발 기회 확대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연수 지원 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4-4. 보통교과 교원의 직업교육 분야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교사 간의 통합 교과 의무화 방안 마련 • 보통교과 교원의 보통교과 영역 내 직업기초능력 관련 교과목 이수 유도 • 직업교육 특성 반영 교과과정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연수제도 구축 및 교육 역량 강화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보통교원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장기근속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지원
	4-5. 지원인력 확보 및 지원인력의 교육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인력 확보를 위해 산학겸임교원, 부전공연수 등을 활용 방안 마련 • 수습교사제도(교사자격을 취득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턴제) 도입을 통한 지원인력 확보 및 교원의 전직교육과 현직교육 연계 • 산학겸임교원 및 취업지원인력 등 현장 전문가의 교수학습역량 제고 • 학교 내 행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 및 자격화 방안 마련
5. 직업교육 시설 및 기자재 개선 방안	5-1. 노후화된 보유시설에 대한 개선 및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수업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시설설비에 대해 수업활용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 실습기자재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구입기자재 활용도 제고
	5-2. 공동실습소 및 공동훈련센터 확충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역 단위로 공동실습소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지침 마련 • 시도지역 외 부족한 지역의 공동실습소 확대 편성 및 활성화 방안 •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운영 기준 마련
	5-3. 지역내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설 및 기자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테크노파크, 폴리텍, 공동기술센터, 대학 및 전문대학, 기업내 연수원 등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훈련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활용 • AP교과 운영을 통한 (전문)대학 내 시설 및 기자재 활용 방안 마련
6.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	6-1. 직업교육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전입금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예산을 지방교육자치 단체에 안정적으로 교부하고 이 중 일정 비율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
	6-2. 직업교육 표준교육비 산출 기준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의 학교 규모 및 교과교육 과정 특성을 반영한 표준교육비 산출 기준 마련

(표 계속)

영역	세부 지원방안	상세 내용
6.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	6-3.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직업교육재정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법에 직업교육기관/과정에 대한 기금지원 근거 마련 고용보험위원회 개선을 통한 특성화/마이스터고 직업능력개발 관련 기금 운용 활성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간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표 6> 산출요인 관련 지원방안 영역 및 세부 지원방안 내용

영역	세부 지원방안	상세 내용
7. 직업교육의 질 관리 방안	7-1. 종합적인 직업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학교알리미, 워크넷, 교육통계 서비스 등 중등직업교육 관련 기존 DB 통합 중등직업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에는 기존 DB 외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정보 추가
	7-2. 지역별 직업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 산업체, 지역사회 전문가 및 인사로 구성된 직업교육 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7-3.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27.6명)를 OECD 평균(23.3명) 수준으로 감축 조정(감축 시 계열 및 전공 특성 고려) 향후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를 마이스터고(20명) 수준으로 감축 조정
	7-4. 일반계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안적 직업교육 과정 관리 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적 직업교육과정 대상인 일반계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직업기초능력 및 진로지도 강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직업교육과정과 대안적 직업교육과정 구분 및 분리 관리 방안 마련 효과적인 대안적 직업교육과정 운영 모형 구축
8. 직업교육 정책 확대 및 강화 방안	8-1. 선취업 후진학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에 재직자 및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직무 연계 전공개설 확대 지원 산업체의 선취업후진학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선취업후진학 운영 성과 평가 및 보완 제도 마련
	8-2. 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한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NCS 기반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운영 및 향후 NQF와 NCS의 체계적 연계 특정 산업분야의 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한 산업분야별 역량체계(SQF) 구축 및 SQF의 NQF와의 연계 방안 마련 NQF 구축·운영 정책의 지속적 확대
	8-3. 관련 부처 정책과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NCS에 따른 계열 개편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연관부처의 적극적 지원 체제 구축 인력양성 및 자격 제정 시 NCS 분야별 연관부처와의 협업 체제 구축
9.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9-1. 고졸 남학생의 병역 관련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의 산업기능요원제 유지 및 인원 확대 특성화고 졸업자 특기병 입영 및 전역 후 중소기업 취업시 경력인정 방안 마련
	9-2. 고교 현장실습생 근로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현장실습생 근로보호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 고교 현장실습 적용 방안 마련

(표 계속)

영역	세부 지원방안	상세 내용
9.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9-3. 재학생 일학습병행제도 도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관련 조항 추가 • 재학생 일학습병행제 관련 중장기적 검토 및 연구 활동

2. 지원방안 영역 및 세부 지원방안별 우선순위

중등직업교육 체제의 전반적인 구성요소에 걸쳐 폭넓게 도출한 지원방안의 실제적인 현장 적용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우선순위가 높은 지원방안은 다른 지원방안과 비교하여 현장에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방안들로, 이 연구에서는 중요성과 시급성의 두 영역을 통해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각 세부 지원방안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을 확인하고, 중요성 및 시급성 응답 결과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이후 각 세부 지원방안의 중요성-시급성 간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체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가.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별 우선순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지원방안 영역별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9.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6.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1.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 ‘3. 직업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은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① 법령 개정, ② 사회적 인식 개선, ③ 재정 확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의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7> 참조).

<표 7>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 우선순위(전체 집단)

번호	세부 지원방안	중요성	시급성	평균	표준편차	우선순위
9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4.16	4.10	4.13	0.93	1
2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4.16	4.07	4.11	0.86	2
6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	4.10	4.04	4.07	0.94	3
8	직업교육 정책 확대 및 강화 방안	4.00	3.91	3.96	0.92	4
7	직업교육의 질 관리 방안	3.93	3.85	3.89	0.81	5
4	직업교육 교원 수급 및 양성 방안	3.92	3.83	3.87	0.83	6
5	직업교육 시설 및 기자재 개선 방안	3.88	3.81	3.84	0.87	7
1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	3.79	3.68	3.74	0.78	8
3	직업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	3.73	3.63	3.68	0.81	9

주) n=1,064

학교집단, 정책집단, 전문가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학교집단은 ‘9.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6.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집단은 ‘6.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 ‘9.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집단의 경우 ‘2. 직업교육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1.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 ‘9.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집단은 학교 및 정책집단과 달리 학생 선발 관련 지원방안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재정 확보 방안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9>, <표 10> 참조).

<표 8>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 우선순위(학교집단)

번호	세부 지원방안	중요성	시급성	평균	표준편차	우선순위
9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4.17	4.11	4.14	0.93	1
2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4.16	4.08	4.12	0.87	2
6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	4.11	4.05	4.08	0.93	3
8	직업교육 정책 확대 및 강화 방안	4.00	3.92	3.96	0.92	4
7	직업교육의 질 관리 방안	3.93	3.86	3.89	0.81	5
4	직업교육 교원 수급 및 양성 방안	3.91	3.83	3.87	0.83	6
5	직업교육 시설 및 기자재 개선 방안	3.86	3.80	3.83	0.86	7
1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	3.77	3.67	3.72	0.78	8
3	직업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	3.71	3.62	3.67	0.81	9

주) n=978

<표 9>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 우선순위(정책집단)

번호	세부 지원방안	중요성	시급성	평균	표준편차	우선순위
6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	4.38	4.30	4.34	0.60	1
9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4.58	4.60	4.59	0.62	2
2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4.40	4.34	4.37	0.51	3
8	직업교육 정책 확대 및 강화 방안	4.35	4.25	4.30	0.71	4
5	직업교육 시설 및 기자재 개선 방안	4.05	3.93	3.99	0.76	5
4	직업교육 교원 수급 및 양성 방안	4.15	4.11	4.13	0.62	6
7	직업교육의 질 관리 방안	4.25	4.12	4.18	0.54	7
3	직업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	3.73	3.65	3.69	0.53	8
1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	4.01	3.89	3.95	0.43	9

주) n=19

<표 10>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 우선순위(전문가 집단)

번호	세부 지원방안	중요성	시급성	평균	표준편차	우선순위
2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4.10	3.87	3.99	0.71	1
1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	3.90	3.69	3.79	0.57	2
9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4.12	3.87	3.99	0.80	3
5	직업교육 시설 및 기자재 개선 방안	3.92	3.70	3.81	0.81	4
4	직업교육 교원 수급 및 양성 방안	3.94	3.69	3.81	0.69	5
3	직업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	3.82	3.69	3.75	0.70	6
8	직업교육 정책 확대 및 강화 방안	4.04	3.79	3.92	0.85	7
7	직업교육의 질 관리 방안	3.91	3.80	3.85	0.65	8
6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	4.01	3.88	3.95	0.95	9

주) n=67

9개 지원방안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인식의 집단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본 결과,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과 직업교육 재정 확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은 전문가집단의 우선순위가 학교집단의 우선순위보다 높았으며,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은 학교집단의 우선순위가 전문가집단의 우선순위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집단과 전문가집단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집단은 중등직업교육 현장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현실적으로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집단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입학자원 관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표 11> 참조).

<표 11> 집단별 지원방안 영역 우선순위 인식 차이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1.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	a	학교집단	978	3.72	0.78	3.812*	c>a
	b	정책집단	19	3.69	0.43		
	c	전문가집단	67	3.99	0.57		
2.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a	학교집단	978	4.13	0.87	1.440	
	b	정책집단	19	4.36	0.51		
	c	전문가집단	67	4.00	0.71		
3. 직업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	a	학교집단	978	3.67	0.81	2.171	
	b	정책집단	19	3.95	0.53		
	c	전문가집단	67	3.81	0.70		
4. 직업교육 교원 수급 및 양성 방안	a	학교집단	978	3.87	0.83	.925	
	b	정책집단	19	4.13	0.62		
	c	전문가집단	67	3.85	0.69		
5. 직업교육 시설 및 기자재 개선 방안	a	학교집단	978	3.83	0.86	1.919	
	b	정책집단	19	4.19	0.76		
	c	전문가집단	67	3.92	0.81		

(표 계속)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6.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	a	학교집단	978	4.08	0.93	7.053**	a>c
	b	정책집단	19	4.59	0.60		
	c	전문가집단	67	3.75	0.95		
7. 직업교육의 질 관리 방안	a	학교집단	978	3.91	0.81	.701	
	b	정책집단	19	4.02	0.54		
	c	전문가집단	67	3.81	0.65		
8. 직업교육 정책 확대 및 강화 방안	a	학교집단	978	3.96	0.92	2.230	
	b	정책집단	19	4.29	0.71		
	c	전문가집단	67	3.81	0.85		
9.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a	학교집단	978	4.14	0.93	2.093	
	b	정책집단	19	4.38	0.62		
	c	전문가집단	67	3.95	0.80		

주) **p<.01, *p<.05

나.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별 우선순위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별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2-4. 고졸 인력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 ‘9-2. 고교 현장실습생 근로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7-3.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 ‘2-2.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및 위상 재정립’, ‘9-1. 고졸 남학생의 병역 관련 제도 개선’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졸 인력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반계고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직업교육과 관련된 방안들인 ‘7-4. 일반계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안적 직업교육 과정 관리 체제 구축’, ‘1-5. 직업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확보’, ‘방송통신고 등 직업교육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직업교육 과정 운영’, ‘1-4.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의 희망자 수용 확대 및 운영 개선’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12> 참조).

<표 12>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별 우선순위(전체 집단)

번호	세부 지원방안	중요성	시급성	평균	표준편차	우선순위
2-4	고졸 인력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	4.49	4.46	4.48	1.03	1
9-2	고교 현장실습생 근로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4.30	4.26	4.28	1.02	2
7-3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	4.25	4.18	4.21	1.10	3
5-1	노후화된 보유시설에 대한 개선 및 활용 방안	4.22	4.18	4.20	1.03	4
2-2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및 위상 재정립	4.24	4.15	4.20	1.03	5
6-1	직업교육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전입금 증액	4.20	4.16	4.18	1.05	6
9-1	고졸 남학생의 병역 관련 제도 개선	4.21	4.15	4.18	1.09	7
2-1	초·중학교 학생 대상 직업 및 진로교육 강화	4.21	4.11	4.16	1.06	8

(표 계속)

번호	세부 지원방안	중요성	시급성	평균	표준편차	우선순위
1-3	학생선발 및 입학상담의 전문성 강화	4.21	4.10	4.16	1.01	9
8-1	선취업 후진학 체계 강화	4.17	4.11	4.14	1.09	10
1-1	국가산업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입학정원 조정	4.20	4.05	4.13	1.03	11
4-2	직업교육 교원 정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4.09	3.99	4.04	0.99	12
6-3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직업교육재정 확보	4.06	4.00	4.03	1.01	13
4-3	전문교과 교원의 표준역량모델을 통한 전문성 강화	4.06	3.97	4.01	1.00	14
7-1	종합적인 직업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4.04	3.97	4.01	0.99	15
6-2	직업교육 표준교육비 산출 기준 개편	4.02	3.96	3.99	1.03	16
8-3	관련 부처 정책과의 연계	4.01	3.93	3.97	1.07	17
9-3	재학생 일학습병행제도 도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	3.98	3.90	3.94	1.09	18
3-2	직업계열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3.94	3.84	3.89	1.07	19
3-4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3.85	3.75	3.80	1.10	20
4-1	신설 계열 및 학과의 직업교육 교원 확보	3.82	3.74	3.78	1.10	21
4-5	지원인력 확보 및 지원인력의 교육역량 강화	3.81	3.74	3.77	1.03	22
8-2	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한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가속화	3.83	3.70	3.76	1.05	23
4-4	보통교과 교원의 직업교육 분야 전문성 강화	3.80	3.71	3.76	1.07	24
1-2	입학 전형 다양화와 선발 기준 개선	3.79	3.71	3.75	1.11	25
3-1	NCS 기반 교육과정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3.81	3.68	3.74	1.14	26
7-2	지역별 직업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3.78	3.69	3.74	1.04	27
5-3	지역내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설 및 기자재 활용	3.77	3.67	3.72	1.08	28
3-5	수업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결과 공유	3.70	3.61	3.66	1.05	29
2-3	지역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의 기능 확대	3.69	3.55	3.62	1.09	30
5-2	공동실습소 및 공동훈련센터 확충 및 활용	3.64	3.57	3.60	1.11	31
7-4	일반계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안적 직업교육 과정 관리 체제 구축	3.64	3.55	3.60	1.05	32
1-5	직업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확보	3.45	3.35	3.40	1.15	33
3-3	방송통신고 등 직업교육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직업교육 과정 운영	3.37	3.28	3.33	1.06	34
1-4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의 희망자 수용 확대 및 운영 개선	3.30	3.19	3.25	1.22	35

주) n=1,064

학교집단, 정책집단, 전문가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학교집단은 ‘2-4. 고졸 인력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 ‘9-2. 고교 현장실습생 근로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7-3.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집단은 ‘2-4. 고졸 인력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 ‘6-1. 직업교육지원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 부담 전입금 증액’, ‘6-3.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직업교육재정 확보’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집단의 경우 ‘2-4. 고졸 인력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 ‘1-3. 학생선발 및 입학상담의 전문성 강화’, ‘9-2. 고교 현장실습생 근로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집단은 학교 및 정책집단과 달리 학생 선발 관련 지원방안을 강조하고 있었다(<표 13>, <표 14>, <표 15> 참조).

<표 13>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별 우선순위(학교집단)

번호	세부 지원방안	중요성	시급성	평균	표준편차	우선순위
2-4	고졸 인력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	4.50	4.47	4.48	1.04	1
9-2	고교 현장실습생 근로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4.29	4.26	4.27	1.03	2
7-3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	4.29	4.23	4.26	1.09	3

주) n=978

<표 14>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별 우선순위(정책집단)

번호	세부 지원방안	중요성	시급성	평균	표준편차	우선순위
2-4	고졸 인력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	4.68	4.63	4.66	0.63	1
6-1	직업교육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 부담 전입금 증액	4.63	4.68	4.66	0.67	1
6-3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직업교육재정 확보	4.63	4.58	4.61	0.68	3

주) n=19

<표 15>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별 우선순위(전문가 집단)

번호	세부 지원방안	중요성	시급성	평균	표준편차	우선순위
2-4	고졸 인력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	4.34	4.22	4.28	1.00	1
1-3	학생선발 및 입학상담의 전문성 강화	4.39	4.13	4.26	0.76	2
9-2	고교 현장실습생 근로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4.30	4.21	4.25	0.86	3

주) n=67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조사하여 도출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실제적 실행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지원방안과 차후 실시해야 할 지원방안으로 우선순위 영역을 구분하였다. 우선순위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방안별 중요성과 시급성 값을 바탕으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4. 고졸 인력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 부터 ‘3-2. 직업계열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까지 19개의 방안들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우선순위가 높은 지원방안에는 주로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과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지원방안에는 직업교육 학생 선발, 시설 및 기자재 개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법령 개정과 같이 중등직업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환경이 개선된 후에 투입 및 과정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별 우선순위 영역 선정

번호	세부 지원방안	중요성	시급성	K-means 군집분석
2-4	고졸 인력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	4.49	4.46	1
9-2	고교 현장실습생 근로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4.30	4.26	
7-3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	4.25	4.18	
5-1	노후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개선 및 활용 방안	4.22	4.18	
2-2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및 위상 재정립	4.24	4.15	
6-1	직업교육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전입금 증액	4.20	4.16	
9-1	고졸 남학생의 병역 관련 제도 개선	4.21	4.15	
2-1	초·중학교 학생 대상 직업 및 진로교육 강화	4.21	4.11	
1-3	학생선발 및 입학상담의 전문성 강화	4.21	4.10	
8-1	선취업 후진학 체계 강화	4.17	4.11	
1-1	국가산업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입학정원 조정	4.20	4.05	
4-2	직업교육 교원 정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4.09	3.99	
6-3	고용보험기금 활용을 통한 직업교육재정 확보	4.06	4.00	
4-3	전문교과 교원의 표준역량모델을 통한 전문성 강화	4.06	3.97	
7-1	종합적인 직업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4.04	3.97	
6-2	직업교육 표준교육비 산출 기준 개편	4.02	3.96	
8-3	관련 부처 정책과의 연계	4.01	3.93	
9-3	재학생 일학습병행제도 도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	3.98	3.90	
3-2	직업계열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3.94	3.84	
3-4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3.85	3.75	2
4-1	신설 계열 및 학과의 직업교육 교원 확보	3.82	3.74	
4-5	지원인력 확보 및 지원인력의 교육역량 강화	3.81	3.74	
8-2	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한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가속화	3.83	3.70	
4-4	보통교과 교원의 직업교육 분야 전문성 강화	3.80	3.71	
1-2	입학 전형 다양화와 선발 기준 개선	3.79	3.71	
3-1	NCS 기반 교육과정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3.81	3.68	
7-2	지역별 직업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3.78	3.69	
5-3	지역내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설 및 기자재 활용	3.77	3.67	
3-5	수업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결과 공유	3.70	3.61	
2-3	지역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의 기능 확대	3.69	3.55	
5-2	공동실습소 및 공동훈련센터 확충 및 활용	3.64	3.57	
7-4	일반계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안적 직업교육 과정 관리 체제 구축	3.64	3.55	
1-5	직업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확보	3.45	3.35	
3-3	방송통신고 등 직업교육 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적 직업교육 과정 운영	3.37	3.28	
1-4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의 희망자 수용 확대 및 운영 개선	3.30	3.19	

V. 결론 및 제언

최근 정부는 중등직업교육 비중과 관련하여 학생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여 점진적으로 중

등직업교육 학생 수 비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산업계 및 학생 수요를 주요하게 고려한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라고 할 수 있다(김진모 외, 2015). 그러나 향후 정부의 계획대로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의 비율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학급 및 학교 수 조정과 같은 실제적 요건부터 현재 일반계고로의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직업계고 교육에도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선과 중학교에서부터의 진로, 사회적 인식, 고졸인력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등 다양한 요건에 대한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중등직업교육 비중 조정에 대한 방향이 새롭게 설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 비율 확대라는 비중 조정 방향에 따른 중등직업교육 지원방안을 다양한 영역에서 도출하고, 도출된 지원방안의 현장 적용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요구분석을 통해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 및 세부 지원방안 도출 결과와 지원방안 영역 및 세부 지원방안별 우선순위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 도출 결과 교육체제를 구성하는 큰 틀인 투입, 과정, 산출, 환경 요소로 구분되어 최종적으로 9개 영역이 도출되었다. 이는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생선발 및 모집이라는 단일 요인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중등직업 교육체제 전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실제 적정 학교 및 학급 규모를 도출한 연구(강호감 외, 2002; 민부자, 홍후조, 2011; 백일우, 권재현, 2006; 허숙, 강호감, 2003), 적정 교원 수급 규모를 추정한 연구(이혜영 외, 2011), 중등직업교육 적정 학교 수를 분석한 연구(정진철 외, 2010) 등 교육 관련 적정규모를 분석한 연구들도 학생 수, 학교 수, 교원 수 등 교육의 적정 규모와 연관하여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원수급, 정책 방향, 산업 및 인구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비중과 연관되어 있기에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별 세부 지원방안 도출 결과 최종적으로 총 35개의 세부 지원방안이 도출되었다. 지원방안은 조사 대상별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의 영역을 제시하였다. 영역별로 투입요소는 학생선발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의 2개 영역 총 9개의 세부 지원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과정요소는 직업교육과정, 교원, 시설 및 기자재, 재정의 4개 영역과 관련하여 총 16개의 세부 지원방안이 도출되었다. 산출요소는 교육 질 관리의 1개 영역과 관련하여 총 4개의 세부 지원방안이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요소는 정책 및 관련 법령의 2개 영역에 대한 총 6개의 지원방안이 도출되었다. 지원방안 영역별 세부 지원방안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과정요소와 관련한

지원방안들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었다. 지원방안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제시되기에 과정요소 중심으로 많이 언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출요소는 투입요소, 과정요소 그리고 환경요소가 통합적으로 작동하여 나타나는 성과측면이기에 산출요소와 관련한 지원방안 제시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투입요소와 환경요소와 관련한 지원방안은 보다 다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실제 요구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등 직업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중등직업교육 비중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정요소 보다는 환경요소 및 투입요소와 관련된 지원방안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다 투입요소와 환경요소 측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 학생 수라는 비중 확대는 교육체제의 과정적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과정적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그리고 환경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9.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2.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6. 직업교육 재정 확보 방안’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1. 직업교육 학생 선발 방안’, ‘3. 직업교육 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방안’은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등직업교육 이해관계자들은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① 법령 개정, ② 사회적 인식 개선, ③ 재정 확보에 대한 지원방안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법령 개정 및 사회적 인식의 경우 중등직업교육 학생들의 지속적 경력경로 설정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를 현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등직업교육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경로 설정, 그리고 사회로의 이행 과정과 이후에 노동시장에서의 대우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고졸 남학생의 군 입대 문제 개선(김향아, 2013; 나승일 외, 2010), 선취업 후진학 체계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새로운 경력경로 설정(박동열 외, 2010a), 고졸취업자에 대한 임금 격차 해소(김향아, 2013)를 강조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넷째,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세부지원방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한 결과 ‘2-4. 고졸 인력의 노동시장 개선 방안’, ‘9-2. 고교 현장실습생 근로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7-3.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 ‘2-2.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및 위상 재정립’, ‘9-1. 고졸 남학생의 병역 관련 제도 개선’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졸 인력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도와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 역시 중등직업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주요하게 언급된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김향아,

2013; 나승일 외, 2010; 최수정, 허영준, 2012). 특히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및 위상 재정립은 중등직업교육이 산업인력양성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산업계 특화된 직업교육 제공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여 중등교육기관 내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과 관련된 것(김선태, 박윤희, 2002)으로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고졸취업 활성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역별 우선순위 결과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조정’ 방안의 경우 세부 지원방안별 우선순위에서는 높은 요구가 확인되었다. 특히 학교집단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 실제 한 학급에서 교사 1명이 교육할 수 있는 적정 학생 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선행연구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요구도가 높은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현재 특성화고의 학급 당 학생 수는 26.9명(2014년 기준)으로 이는 중등직업교육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마이스터고의 20명, OECD 평균인 23.3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재정 관련 지원사항에 있어서도 집단별 요구도가 조금씩 상이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부 지원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영역 선정 결과, 최우선 지원방안에는 주로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과 직업교육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선 지원방안에는 직업교육 학생 선발, 시설 및 기자재 개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인식 개선이나 법령 개정과 같이 중등직업교육의 환경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환경적 개선과 함께 투입 및 과정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중등직업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중등단계 직업교육 비중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지원방안들이 함께 실현되어야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중등직업교육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와 합의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들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기에 중등단계 직업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합의 및 협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중등직업교육 지원방안들은 단순히 중등직업교육의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중등직업교육 질 관리 및 질 담보를 함께 추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

방안의 중요한 영역으로 중등직업교육의 질 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중등직업교육의 질 관리 및 질 담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실제 중등직업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 연구들에서 제시한 지원방안들이 상호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기에 중등직업교육 관련 정책 강화 및 확대, 법령 개정, 재정지원 등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뿐 아니라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같이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지원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제시한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영역은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 실현을 위해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자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중등직업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투입요소인 학생 선발, 사회적 인식 개선, 과정요소인 직업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직업교육 교원 수급 및 양성, 직업교육 시설 및 기자재, 교육재정, 그리고 산출요소인 직업교육 질 관리, 마지막으로 환경요소인 직업교육 정책 및 직업교육 관련 법령별 각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이러한 구성 요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각 영역별 요인들은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의 현행 유지와 함께 중등직업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고 관리됨으로써 중등직업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중등직업교육 학생 수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중등직업교육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중등직업교육 체제 전반에 걸쳐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실제 중등직업교육 주체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등직업교육 비중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실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중등직업교육 비중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등직업교육 관련 이해관계자 외에도 일반 중등교육 이해관계자의 의견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중등직업교육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학생 및 학부모, 산업체 관계자의 의견 역시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과 전남 지역 교원의 응답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 모집단과 비율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호감, 박영만, 송광용, 허숙, 송민영, 강창호. (2002). 초·중·고등학교 적정규모 학급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5). 시도교육청 고교 학생 배치계획 의견수렴. 교육부 내부자료.
- 교육부. (2016. 1. 25.).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보도자료.
- 교육부. (2016. 4. 25.).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발표. 보도자료.
- 길대환, 김진모. (2009). 기업체 HRD 담당자의 직무교육 요구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2), 153-175.
- 김기홍, 장명희, 김종우. (2010). 직업교육 교원 역량 강화 방안. The HRD Review, 13(8) 1-32,
- 김선태, 박윤희. (2002).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 재구조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신복. (2011). 교육발전: 정부역할과 정책수단. 한국행정학회 정기학술대회(2011년 하계학술대회).
- 김종우, 최수정. (2014).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Krivet Issue Brief, 58.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진모, 이명훈, 이시균, 김화영, 조영아, 송민철, 정보영, 최화영. (2015).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비교.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5(3), 298-322.
- 김진모, 이명훈, 이시균, 김화영. (2014). 중등단계 직업교육 적정규모 및 체제개편 방안 연구. 서울: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 김진모. (2015, 5). 중등직업교육 규모 적정화 방안. 2015년도 한국직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중등직업교육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자료집.
- 김진모. (2015. 6. 10.). 능력중심사회는 중등직업교육부터. 내일신문, 22.
- 김향아. (2013). 최근 고졸채용확대 현황과 시사점. 노동리뷰, 97, 83-96.
- 나승일, 김기용, 문세연, 민상기. (2009). 정부부처 위탁 지원 특성화고 운영 활성화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2), 49-76.
- 나승일, 장명희, 김강호. (2010). 국립 마이스터고 중소기업청 이관 후 거버넌스 재구조화 및 발전 방안. 서울: 중소기업청.
- 민부자, 홍후조. (2011).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학급·학교 규모에 관한 시론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2(2), 1-24.
- 박도순, 이재강, 강무섭, 이병욱. (2004).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연구. 정책기획위원회.
- 박동열, 박윤희, 김진모, 이병욱. (2010a). 전문계고 체제개편 추진 방안(로드맵)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동열, 백성준, 최동선, 장명희, 김미란. (2010b). 전문계 고졸 인력 수요와 교육역량 강화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소연. (2009).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평가 요구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5(3), 115-133.
- 백성준, 황인성. (1997). *학교·학급규모 적정화와 재정 대책*.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백일우, 권재현. (2006). 단위 학교 적정교육비 분석을 통한 규모 및 운영의 적정화. *교육재정경제연구*, 15(1), 243-266.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송창용. (2011). *고령화 시대의 이슈와 정책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명의, 서리나. (2002). 가사·실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의 체제개편 모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3), 11-24.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공래, 고상원, 조황희, 심상완. (1999). *공업계 고등학교 기술교육 진흥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용환, 이윤조, 금지현. (2008). 농·공 복합계열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발전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2), 115-138.
- 이종성, 강경중, 장명희, 김중우, 김해동, 최지희, 옥준필, 이용순, 주인중, 김선태, 나현미, 강종훈, 서창교, 이수경, 정향진, 김영상, 변숙영, 정지선, 이병준, 손유미, 김덕기, 나영선, 이현정. (1997). *교육체제개편에 따른 고등학교 직업교육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주호, 홍성창. (2014). *한국 중등 직업교육 체제의 구축_산업화 단계의 실업계고등학교 정책*. KDI 국제정책대학원.
- 이혜영, 최정윤, 김지하, 김철희, 이서현. (2011). *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 부문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희, 김중우, 최동선, 박철우, 나승일, 이영호. (2012). *고졸취업 및 후진학 활성화 정책 성과분석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진철, 이종범, 이건남. (2010).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충청북도 전문계고 발전 전략 연구*. 청주: 충청북도교육청.
- 정철영, 박행모, 강대구, 나승일, 김진모. (2013). *농업교육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정철영. (1997).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 규정. *직업교육연구*, 16(2), 35-50.
- 최수정, 허영준. (201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페이퍼*, 2012-9, 1-33.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2013-2040*.
- 통계청. (2014). *KOSIS 100대지표: 2014 합계출산률*.
- 한국고용정보원. (2012). *2011-2020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 (1970-2015).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허숙, 강호감. (2003). 적정 학교규모의 탐색-미국의 사례와 우리의 제안. *교육논총*, 22, 133-158.
- 허영준, 김기홍, 박동열, 전승환. (2014).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Trautvetter, S. (2009). *Reducing the negative effects of large schools*. National Clearinghouse for educational Facilities.

- 최초접수일: 2016년 8월 16일
- 논문심사일:
 - 1차 외부심사일: 2016년 8월 22~29일
 - 2차 편집위심사일: 2016년 8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1일

Abstract

The Study of Support Plans on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with the Change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Size

Jin-Mo Kim* · Myunghun Lee** · Kiyoun Kim*** ·

Yuong-Ah Cho**** · Jinju Oh · Ji-eun Ryu · Seongeun Kim*****

*Department of Vocational Education & Workforce Development /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KMPlus Consulting ·

****Sooncheonhyang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support plans on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with the change of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size, and figure out prior pl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tent analysis on 14 studies were conducted to deduct support plans, then experts' review and need analysis of support plan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9 domains of support plans were deducted. Second, 35 particular support plans were deducted. Third, support plans about statute revision, improvement of social awareness, and security of finance were selected as prior domain of support plans. Fourth, support plans about improvement of labor market, reinforcement of protection for students in field study, reduction of students per class were selected as prior particular support plans. Fifth, the top priority of support plans included improvement of social awareness and statute revision about vocational education.

Considering the result of this study, some suggestions for successful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system reform were proposed. This study would be meaningful founding to suggest support plans which are necessary to maintain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size as current level in multilateral ways, and to propose priority of support plans with comprehensive reflection of stakeholder's suggestions.

※ Key words: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size of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support plans on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